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 한과 속 노조법 시행령 폐기·원청교섭 쟁취 결의대회 ...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을 대상으로 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조정 신청에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26일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영하로 떨어진 한과 속에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교섭을 거부해 온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쟁의조정 사건의 결과를 앞두고 원청 교섭권과 쟁의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노동위원회 내부에서는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쟁의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회의가 이어졌다.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22일과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세 차례 조정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세 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불출석하며 교섭 책임을 외면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투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제철의 자회사 전환과 직접고용 회피에 맞서 53일간 총파업과 통제센터 점거 투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구속 위협에 직면했다. 이후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현대제철의 실질적 사용자성은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원청은 여전히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역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원청이 교섭 책임을 회피하면서 투쟁을 이어왔다. 두 지회는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조정회의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결과를 기다렸다.

결의대회 발언에 나선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대제철은 우리의 임금과 노동조건, 산업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부정해 왔다”며 “오늘 조정회의는 원청의 교섭 거부다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중지 결정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신속히 진행해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법과 판결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했음에도 자본은 교섭을 거부해 왔다” 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크고 강력한 투쟁을 모아가겠다” 고 말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이날 조정회의 결과를 현장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투쟁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노조법 2조 개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확인적 입법” 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과 지침으로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가 아닌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도 함께했다. 김용태 GM부품물류지회 지회장은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원청 한국지엠이 집단해고를 단행했다” 며 “일은 원청이 통제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간접고용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김용태 지회장은 현대제철과 거통고의 투쟁이 GM부품물류 투쟁과 다르지 않다고 하며, 원청 교섭을 쟁취할 때까지 연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가 마무리된 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가 종료됐다. 중노위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쟁의조정 사건에 대해 노사 간의 견 차이가 크고 사용자의 교섭 거부 책임이 존재한다고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동시에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고, 지회들이 제시한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조정 중지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 남아 있던 참가자들은 환호와 함께 파업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지회들은 조정 중지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 한 합법적 쟁의행위의 출발점이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번 조정중지 결정이 노동자의 판단과 투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시행령이 원청 교섭 회피의 빌미로 작동하고 있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투쟁과 GM부품물류지회의 싸움을 원청 책임을 묻는 공동의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